

2026. 10. 27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김 제 시 의 회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정경원 의원)

의안 번호	2026 - 121
----------	------------

발의연월일 : 2026. 10. 27.

발 의 자 : 정경원, 이정자, 김승일,
김진수, 최보선, 오상민,
유진우, 김영자, 오승경,
문순자, 주상현, 김민완,
장민우, 손정애 의원(14명)

1. 주 문

붙임 “결의문” 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교부세를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필수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법정재원으로, 제도 본연의 목적과 실질적인 배분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
- 특히 김제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면서 농업 기반 유지와 미래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긴요함

- 이에 지역의 재정 운용권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 및 법정 교부재원의 실질적 보전 요구
- 지방교부세 감액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 재원 조달 방안 마련 촉구
- 지방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고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한 안정적 지원체계 확립 요구
- 지방재정 관련 제도 변경 시 지역별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절차 마련 촉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 결 의 문 : 별첨
- 송 부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갑제사부안군을)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개선 촉구 결의문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방의 미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줄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의 목적과 취지를 앞장서 지켜야 한다. 법정 교부율의 형식만 지키면서 그 실질을 훼손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라 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내국세에서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실질적인 재원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의 2027년도 보통교부세는 2026년도 4,382억 원을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약 6,4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교부재원 감소가 반영될 경우 약 4,531억 원에 그쳐, 당초 예상액 대비 무려 30.2%에 해당하는 약 1,957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고령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키고,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시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소중한 재원이다.

김제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국가 식량 안보의 기반을 지키고, 스마트팜과 종자산업, 새만금 연계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시민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당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지역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김제시에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주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주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 국가의 새로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축소해도 되는 재원이 아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베푸는 시혜적 지원금이 아니다.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재정의 핵심 법정 재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를 감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가뜰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는 지방의 희생이 아닌, 지방과의 상생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제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권을 수호하고, 국가와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합리적인 재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법정 교부율에 따른 일반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려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부세 감축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 제도 개편에 앞서 자치단체별 의견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전협의 절차를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수립하라!)

2026. 10. 27.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